

# 북한의 IRBM 실험 발사 평가와 북미관계 전망

## Online Series

2017. 02. 24. | CO 17-06

정성윤(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이 2월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주체106(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에 나설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는 좌절되었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집착이 여전하다는 것이 방증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평가와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도발 분석 및 평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실험 도발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능력과 운용능력을 확인 및 강화하려 했다. 우선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무한궤도식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발사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은닉성과 신속 발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선제타격능력 무력화를 기도한 것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2차 보복능력을 강화해 자신들의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포석이다. 아울러 북한은 작년 8월 성공했던 동일한 재원의 SLBM을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함으로써 미사일의 다목적 활용

가치를 제고했으며, 연료량 조절과 고각발사 방식을 통해 비행거리를 500km로 조절하면서 미사일의 전술적 활용 범위를 확장했다. 이는 북한이 열악한 군비 여건을 감안해 최소 비용·최대 효용의 방향으로 미사일 능력 증강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한다.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도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북미관계를 공세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金正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라고 강조하고 2017년을 “싸움 준비의 해”라고 말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핵위협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미국의 신속하고도 대폭적인 양보가 없다면 미국에 대한 비타협 노선과 강경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기의 표현이다. 북한은 주도적인 북미관계 설정과 더불어 미중·한중 간 갈등을 획책하고 역내 반(反) 한·미·일 안보연합구도를 획책하고자 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북한은 도발 전 이미 미사일의 기술적 설계 값을 전제로, 실험 직후 역내에서 사드 논쟁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계산과 정세 판단에 의한 무모한 도발이다. 우선 북한의 금번 도발이 한미의 확장억제력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못한다. 즉 미사일 운용체계의 은닉성·신속성·다종화로 인해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한미 연합전력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와 미국의 압도적인 대북 핵전력 우위를 통한 대북 징벌적·거부적 억지력(deterrence by punishment and denial)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한미의 대량보복과 선제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억지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금번처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활용 전력을 강화할 경우 역설적으로 북한 지휘부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타격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번 도발로 북한에게 호혜적인 역내 안보구도 및 북미관계가 설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이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경우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강압의 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중심의 대항 동맹 결속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안보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사항으로 미국과 심각한 구조적 갈등을 획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안보와 외교에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작용과 역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다.

## 대북강압의 상승과 북미관계 악화

향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대북강압 강화와 북미관계 악화가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화 동인이 될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제재 준수 의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실제로 발 하루만인 지난 13일 유엔안보리는 신속하게 언론성명을 채택했고, 추가 도발에 대한 ‘중대한 추가 조치’도 적시했다. 개별 국가들의 압박과 제재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당장 한·미·일 3국은 비핵화 원칙과 목표를 엄격히 고수하며,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정보자산 강화 및 공유에 노력할 것이다. 2월 16일 한·미·일 3국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초기와 같은 엄격한 비핵화 조건을 재천명한 것이다. 중국도 대북강압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소극적으로 제재에 임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등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증가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설정에 북핵 문제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작년 8월 사드에 대한 반대 표현 명시를 빌미삼아 유엔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무산시켰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언론성명 채택에 반대하지 않았고, 13일 북한산 무연탄 1만 6천 톤의 수입을 거부한데 이어 18일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의 전면금지를 발표한 것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대북제재의 강화 국면 속에서 북미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양국이 상호 요구 조건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서로에 대한 강압 수준을 점차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면의 전략적 공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관계 설정 보다 도발을 통한 압박을 선택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로 인한 미국의 추가적 압박과 제재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 이유는 제재로 인한 고통을 단기적 차원의 감내 가능한 비용으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제재로 인한 단기적 손실보다는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장기적인 전략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셈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큰 조건들을 내세우거나, 미국이 당장 손해를 감수하며 받아들일 긴급한 이유가 없는 조건들에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군축’, ‘핵동결-평화협정’이 대표적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높고 미 본토 위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축은 불필요하며 핵동결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과 긴박함 또한 높지 않다.

미국 또한 당분간 북한과의 타협 대신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매우 큰 사안”이며 “매우 강력하게 북한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향후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중대 현안 순위에서 격상시키고, 대북강압의 수준과 폭을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평소 대북강압 외교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미국의 강경정책을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결심 그리고 정책결정 내용들을 강압적 수단에 의해 변경시킨 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인하려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강압의 수준을 점차 상승시킬 것(screw up)이다.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대북강압책은 그 수준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강도 증가→부분적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선언→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 단행→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에 대해 레드라인 제시 등을 포함한 묵시적 선전포고(tacit ultimatum)’일 것이다. 하지만 동맹에 대한 비용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략자산 상시배치와 예방타격 전략을 실제 적극 검토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단,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핵 위협의 증가 보다는 중국의 대북 협조 여부에 따라 실행 시기 및 내용 그리고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북한이 조건 없는 핵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강경정책이 본질적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북한이 반복적인 핵실험으로 상당한 성과를 확보한 상황에서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효용과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의 핵실험 유예 선언은 기껏해야 대화 재개를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건인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할 것이다.

###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대북강압 상승과 북미관계 악화 국면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전략적 사항을 유념해야만 한다. 첫째,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굳건히 유지해야만 한다. 북한은 기술적 준비가 끝나면 폭발력 40~1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수소탄 실험의 완성이라 주장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충분한 능력을 확보 및 시연하지 못한 무수단 미사일과 ICBM, SLBM의 추가 실험 필요성도 여전히 높다. 하지만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 고강도 제재 수단을 이미 소진한 한국 입장에서 추가 제재 수단 마련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한국은 제재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와 북한의 태도 및 정책 변화가 없을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credibility)를 북한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인지시키는데 우선 집중해야만 한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 제재 수단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제재를 중층적으로 부가하는 경우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협상카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대화 재개 시 한국의 대북 교섭능력 강화와 이해의 반영 정도는 제재의 전략적 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둘째, 북미관계의 변화 여부에도 주목해야 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강압 증가와 중국의 적극적 협조로 인해 북한의 저항능력이 단기간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극히 제한된 핵 사찰 허용 등 전략적 손실이 크지 않은 사안을 양보하며 북미대화를 희망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제재 강화 노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북한의 최우선적 목표는 제재국면 회피와 핵무기 개발 환경의 확보일 것이다. 이 경우 비록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되더라도 한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북미대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자칫 한국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유도→대화 지속 메커니즘 구축→북한의 정책 선택지 변화 견인’과 같은 제재 운용전략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세 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만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